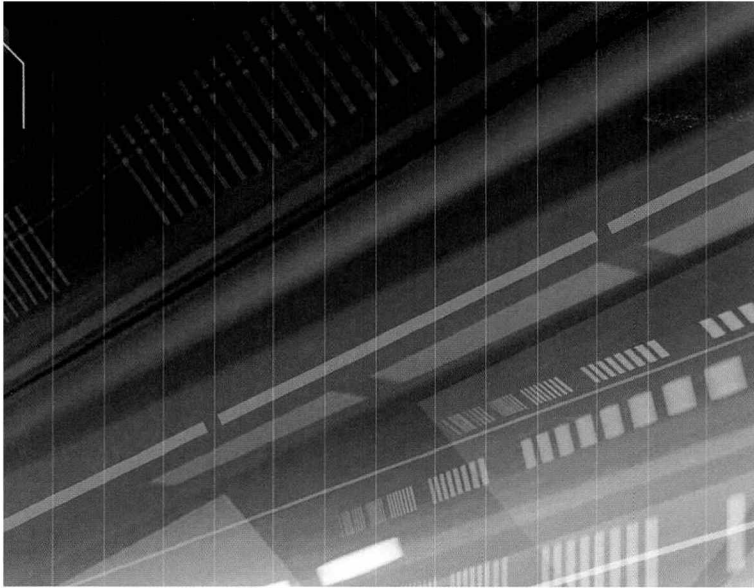


ESCO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ESCO 75% “내년도 ESCO시장 밝다!”

ESCO
2007

ESCO협회(회장 유제인)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ESCO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등록 ESCO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조사에서 각 ESCO들은 자금, 제도, 운영 등에 있어서 각가지 의견을 쏟아내 아직 제도정책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ESCO의 75%가 내년도 ESCO시장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밝혀 에너지절감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다.

■ 이선호 편집장(w3master@energycenter.co.kr)



이른 바 전업 ESCO사인 'E'사의 올해 실적은 가히 눈부시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내년도 역시 ESCO분야에서의 매출신장과 새롭게 진출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분야에서의 신규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기술력 배양에 힘쓴 결과 올해부터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대기업에 속하는 'S'사는 올해 ESCO사업을 공식적으로 접기로 했다. 연 100억 원대의 매출을 ESCO 분야에서 올리던 이 회사는 ESCO자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고 아파트 소형열병합발전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ESCO사업의 메리트가 줄어들었다고 판단, ESCO사업의 철수를 결정했다.

이와 같이 ESCO사업에서 '극과 극'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150개 등록 ESCO를 대상으로 'ESCO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조사'가 실시됐다. 이 중 ESCO사업의 향후 성장전망을 묻는 질문에 75%의 ESCO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사업의 주체인 ESCO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에너지사용자들의 인식확대를 꼽는 기업이 많았다. 즉, 저렴한 금리로 초기 투자비 없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및 건물가격 상승을 꾀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유가의 지속과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량규제 압박, 에너지진단 의무화에 따른 ESCO와의 연계 등이 ESCO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규모 축소설 및 사업수행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 증대, 투자비회수기간에 대한 부담감, 국가기관 에너지담당자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ESCO사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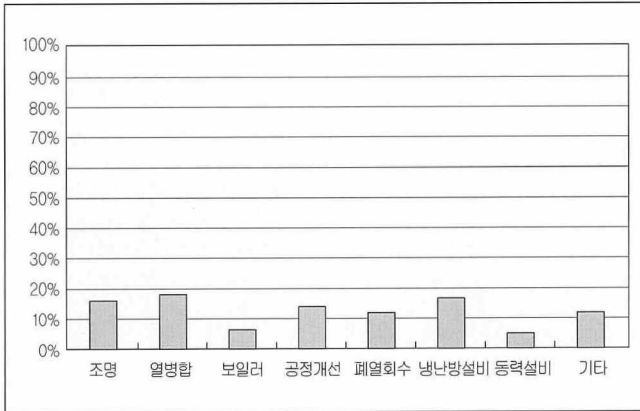
ESCO사업을 추진할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문제가 거론됐다. 에너지사용가는 성과배분제로 100%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보증제로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ESCO는 자체투자실적을 만들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인 것. 또 정책자금의 조기소진문제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설문조사의 단골메뉴였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추천을 받은 후 인출시 은행권 보증이 어렵다는 하소연도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고 대기업들은 ESCO자금의 중소/대기업 분할 적용으로 사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ESCO들의 다양한 노력도 표출됐다. 대부분의 ESCO들은 자금확보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매출채권 팩토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금리인데다 팩토링 전환시 해당 금융권의 요구서류가 너무 많아 ESCO들은 시간적, 금리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자체자금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한 회사는 자금운용에 큰 타격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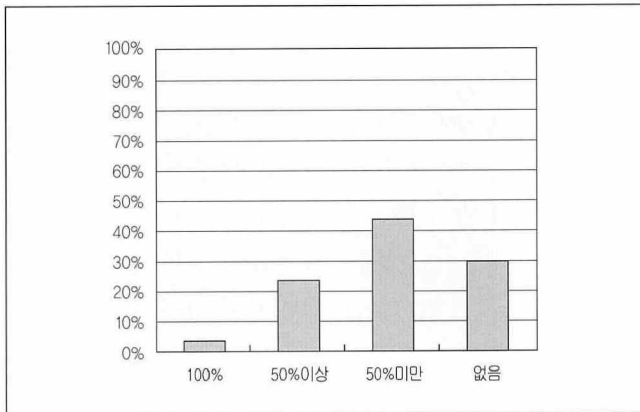
이와 관련 ESCO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요구했다.

첫째,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통 자금이 일찍 소진되는 경향이 있어 하반기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을 확대하고 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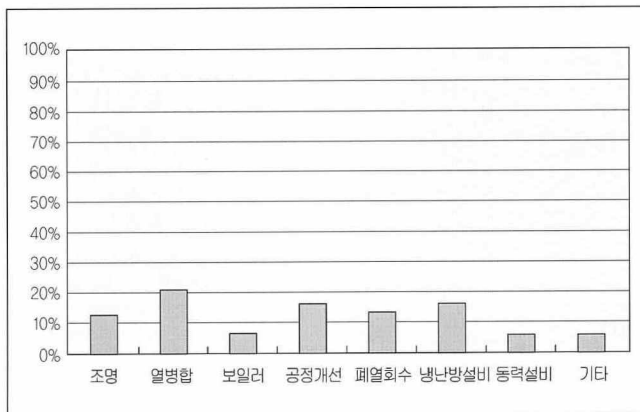
Q 귀사의 주요사업 분야는?



Q 귀사의 전체매출 중 ESCO사업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Q 귀사의 주력 ESCO 분야는?



소기업 구분을 폐지해야 하며, ESCO자금의 실제적인 수혜자는 ESCO가 아니라 에너지사용가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ESCO사업의 확대를 위해 일부 대기업 및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적격심사기준을 재조정하고 에너지절감률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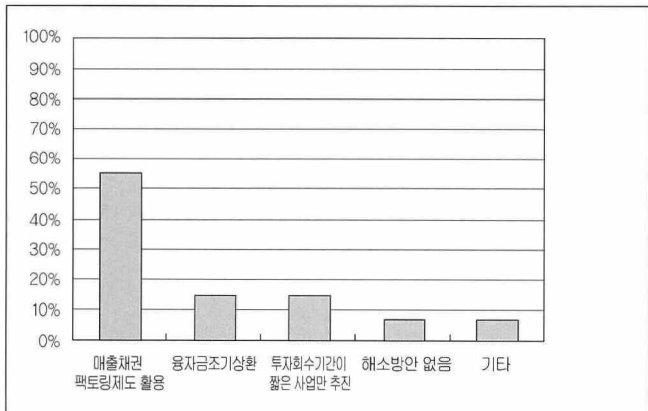
셋째, ESCO의 부채율 증가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제도를 신설해 달라. 또한 고객 부도로 선투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국가기관의 에너지절약 실태조사 실시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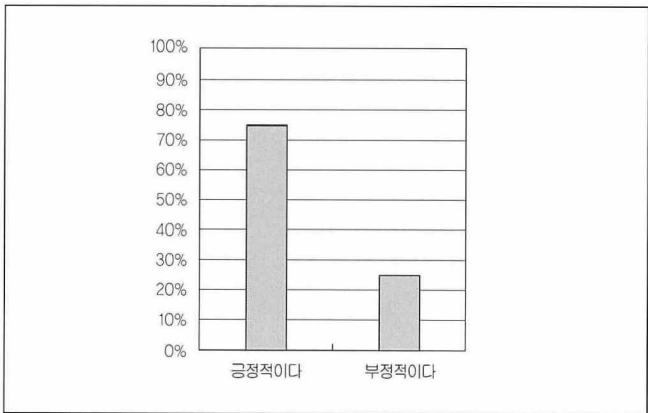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 등록된 ESCO들의 주력사업에 대한 그림도 나왔다. ESCO들의 주력사업은 열병합, 냉난방설비, 조명, 공정개선 순이었으며 ESCO사업은 전체매출에서 50%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SCO 등록자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는 역시 사업성 미확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현행 관리제도에서의 개선점으로는 소요자금의 90%까지만 지원되는 것을(2006년도) 총 소요자금의 100%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지 말고 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SCO 등록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는 제2종밖에 등록할 수 없으나 냉동공조기술사나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분야면에서 절대 상이한 직종이 아니라는 것. 또한 법적으로는 불필요한 장비를 많이 구입하게 되므로 주력사업에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장비구입비를 경감시켜 주거나 등록시 보유 및 임차장비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 등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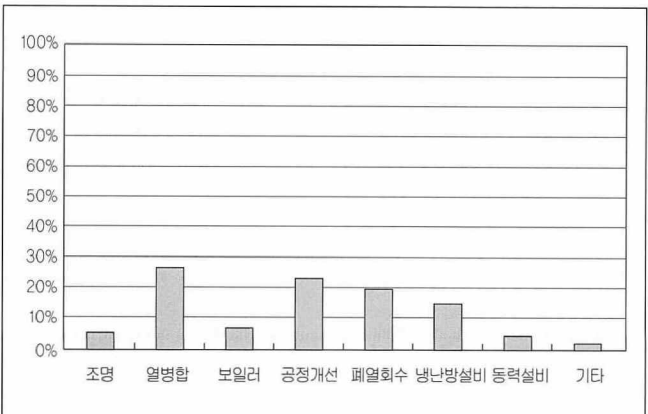
ESCO사업 추진시 증가되는 부채율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는가?



ESCO 사업의 향후 성장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수) 참여 희망시 필요로 하는 교육분야가 있다면?



ESCO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부서 유무와 특정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의 확립을 통해 ESCO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과보증제에 대해 ESCO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에너지절감률 보증에 따른 '차액배상'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ESCO에서 사업수주를 위해 에너지절감률을 부풀려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의지가 불분명할 경우 '보증차액' 발생이 반드시 현실화 할 것이므로 검증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며, 실제 운전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운전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ESCO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세미나 및 교육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ESCO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회에서 실시할 경우 150여명이 넘는 인력을 참석시키겠다는 답을 했으며 열병합과 신재생에너지설비, ESCO 추진 사례 및 에너지절감실적, 효율개선기법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또한 자금추천 및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는 ESCO도 있었다.

ESCO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ESCO들의 의견을 집약해 관계 당국에 정책건의할 예정이다.